

기세등등 ‘野’... 하락세 ‘與’, 정권심판론 방어 반전카드 필요

국민의 선택, 4·10 총선

갤럽 여론조사서 與 34% 野 33%
“투표까지 남은 시간 너무 짧아
새로운 이슈로 지지율 높여야”

국민의힘 상승세는 끝난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총선을 16일 앞둔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물론 양 정당의 격차는 아직 오차범위 내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3%였다. 지난 조사(3월2주차)에서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를 기록했다. 양쪽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월5주(40%) 이후 추세선이 내려가고 있고, 민주당은 3월1주(31%) 이후 추세선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길 바란다’(정권 견제론)는 답변은 51%로, ‘야당 후보의 다수 당선’(정권지원론)(46%)보다 높



4.10총선을 약 2주 가량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이 세워져있다. /뉴스시스

았다. 야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과 다른 소수정당까지 포함한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작동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미래 30%, 더불어민주당 23%, 조국혁신당 22% 순이었다. 개혁신당은 5%, 새로운미래 2%, 자유통일당 2%, 녹색정의당 1%였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15%였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1%, 민주당 42.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2.0%포인트 올랐다.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양당 간 차이는 2.9%포인트에서 5.7%포인트로 벌어졌지만, 아직 오차범위 내에 있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미래

가 29.8%, 조국혁신당이 27.7%, 더불어민주당연합이 20.1% 순의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미래의 격차가 2.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지지도를 합치면 47.8%로 50%에 육박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하락세, 민주당의 상승세와 관련해 “반전카드가 없으면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요소를 상쇄할 만한 다른 어떤 카드가 나와야 하는데,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다”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국민의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동훈 체제로 숨겨왔던 정권심판론을 이종섭·황상무건 등 당정각등으로 막판에 (민주당에) 발미를 주면서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요소를 쥐버렸다. 당정각등의 원인은 용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하락세를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투표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채 교수는 “정권심판론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이슈로 2주 정도 시간을 낭비했다. 총선 때는 지

지율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당에) 힘을 더 실어줬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이슈들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 조사는 추세선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은 하향이고 민주당은 상향이다. 리얼미터도 민주당은 횡보하면서도 추세선이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은 3월 들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권심판 구도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9~21일 실시됐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실시됐으며, 무선(97%)·유선(3%) 이중 RDD 표집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용인 민생토론회...첫 기초단체 개최
“리모델링·건축허가 등 권한 이양
교통 인프라 등 대폭 확충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인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건물 건축 허가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해 정부는 작년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먼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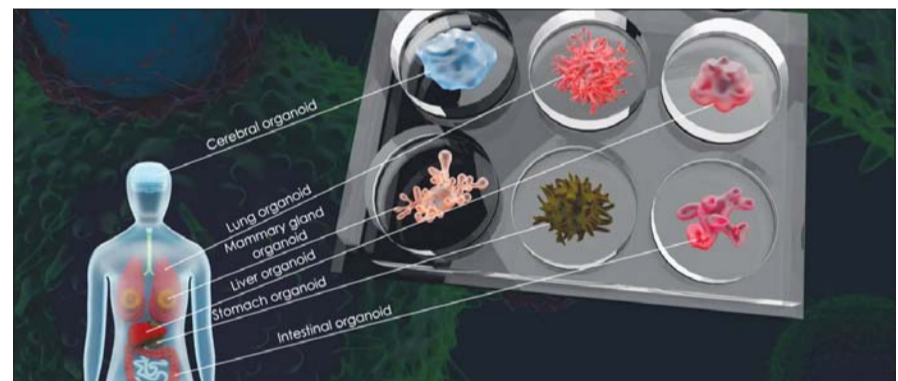
또,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의 본격 추진을 비롯해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청년들이 용인에서 문화예술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창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오가노이드를 통해 나에게 맞는 약물과 치료법을 찾는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진다.

“환자 손상된 장기 대체하는게 최종 목표”

» 1면 ‘오가노이드가 여는 미래’서 계속

◆장기 교체의 꿈이 시작되나

오가노이드의 최종 꿈은 ‘장기 이식’이다. 수만명에 달하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희망이 되고, 인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자신의 조직을 떼어내 맞춤형 장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3D 프린터로 필요한 장기를 바로바로 찍어내 손상된 환자의 장기를 대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오가노이드의 대형화다. 현재 실험실에서 키워내는 오가노이드는 실제 장기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크기는 최대 2~3mm에 불과하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오가노이드도 많이 발전된 단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실제 장기와 교체되기엔 턱없이 작은 수준이다.

오가노이드를 실제 인체 장기 크기로 키우고, 뇌와 장의 기능도 실제 성인의 뇌와 장만큼 높이기 위해 전세계에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숙제는 누구에게나 맞는 ‘기성품(off-the-shelf) 오가노이드’

다. 개별 환자의 조직 세포에서 분화한 맞춤형 오가노이드도 필요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나 전쟁 상황에서는 그 분화 과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3D 프린터로 빠르게 찍어내서 모든 사람의 장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기성품 오가노이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나와 타인의 조직을 구별하는 ‘조직 적합성 항원(HLA)’이란 단백질을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기성품 세포주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또 세포주를 이용해 장기를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포터블 3D 프린터도 필요하다.

손미영 박사는 “크리스퍼와 같은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 기성품 세포주가 개발되면, 이 세포주를 활용해 빠르게 오가노이드를 찍어낼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오가노이드뿐 아니라 이런 첨단 기술들이 모두 최고 단계에서 합쳐져야 오가노이드를 통한 장기 이식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